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 2.

산 림 청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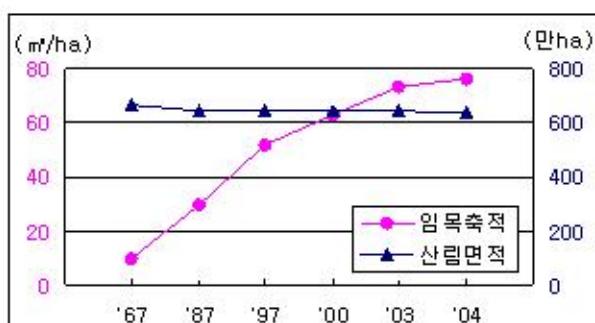
목 차

I.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3
II.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7
1.	산림정책의 미션·비전 및 정책목표	7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8
III.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31
1.	전자정부를 통한 자연휴양림 맞춤형 서비스 구현....	31
2.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국유림 경영 효율화....	32
3.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3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34
1.	정책성과 측정체계	34
2.	혁신과제 측정체계	37
V.	마 무 리	38

I.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 산림자원 육성 부문

- 우리 산림은 지난 '82년 FAO에서 인정할 만큼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
 - 30년이 채 안된 어린나무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98~'02까지의 공공근로사업 이외에는 숲을 가꾸지 못했던 데에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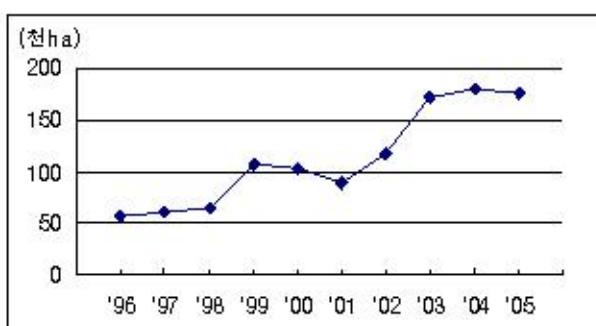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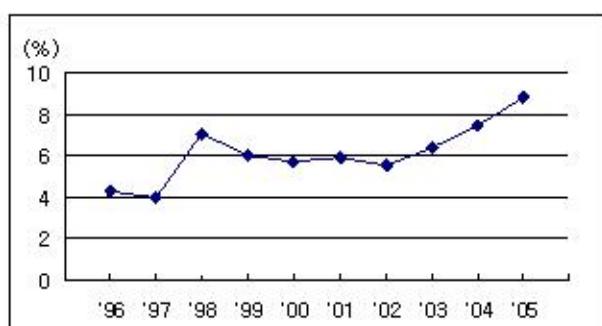


<선진국의 임목축적 ('00년 기준)>

- 참여정부 들어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
 - 이와 함께 국산재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값싼 외재와의 경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자급률이 꾸준히 증가



<숲가꾸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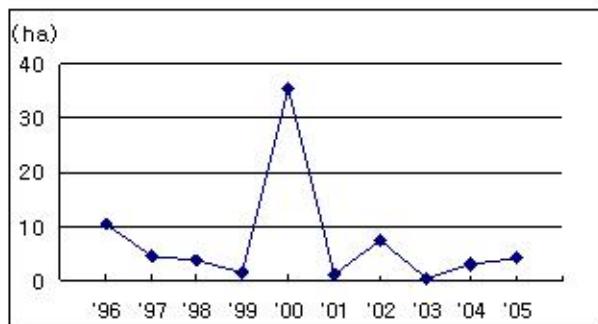


<목재자급률 추이>

- 산림의 경제·환경 등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가꾸는 정책 기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

□ 산림재해 방지 부문

- 산불피해의 방지를 위해 초대형헬기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불 초동진화 역량 증가 등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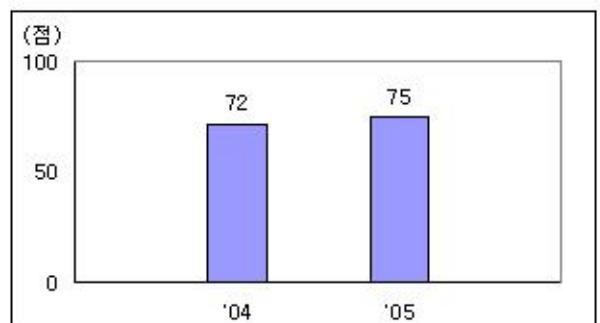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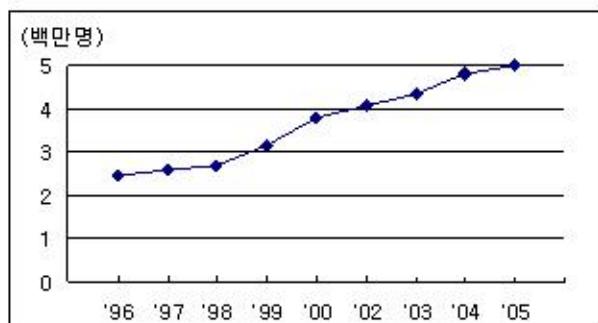


<산불 1건당 피해면적> <선진국의 산불 1건당 피해면적('00~'04)>

- 소나무재선충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특별법 제정, 예산확대 등 제도적인 면을 보강하였으나 현장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

□ 휴양·문화 등 산림서비스 부문

-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
 - 수요에 비해 자연휴양림 등 시설이 부족하고 숲 체험, 산림교육, 등산 문화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도 아직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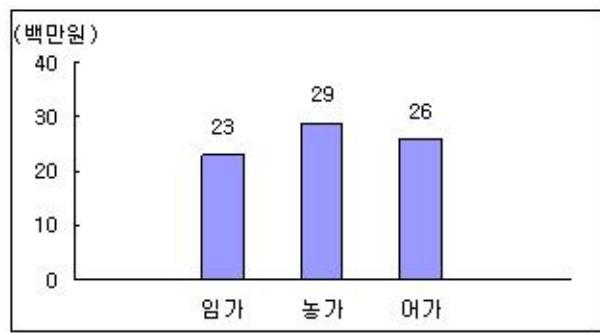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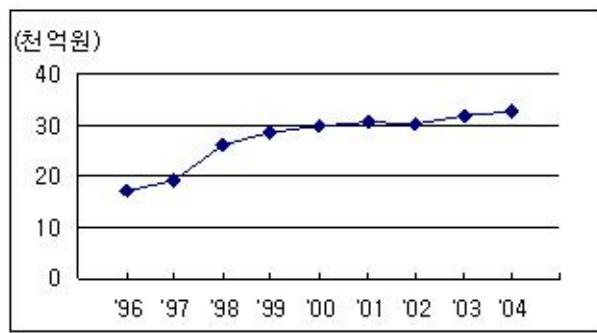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산림휴양시설 이용 만족도>

- 가꾸는 정책과 함께 국민의 여가 선용,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산림산업의 경쟁력 부문

- 임산물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으나 GDP 대비 0.4% 수준이고 아직은 임업인 소득도 낮아 산업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
 -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산림과학기술은 OECD 평균(12위) 수준으로서 2013년까지 세계 7위를 목표로 도약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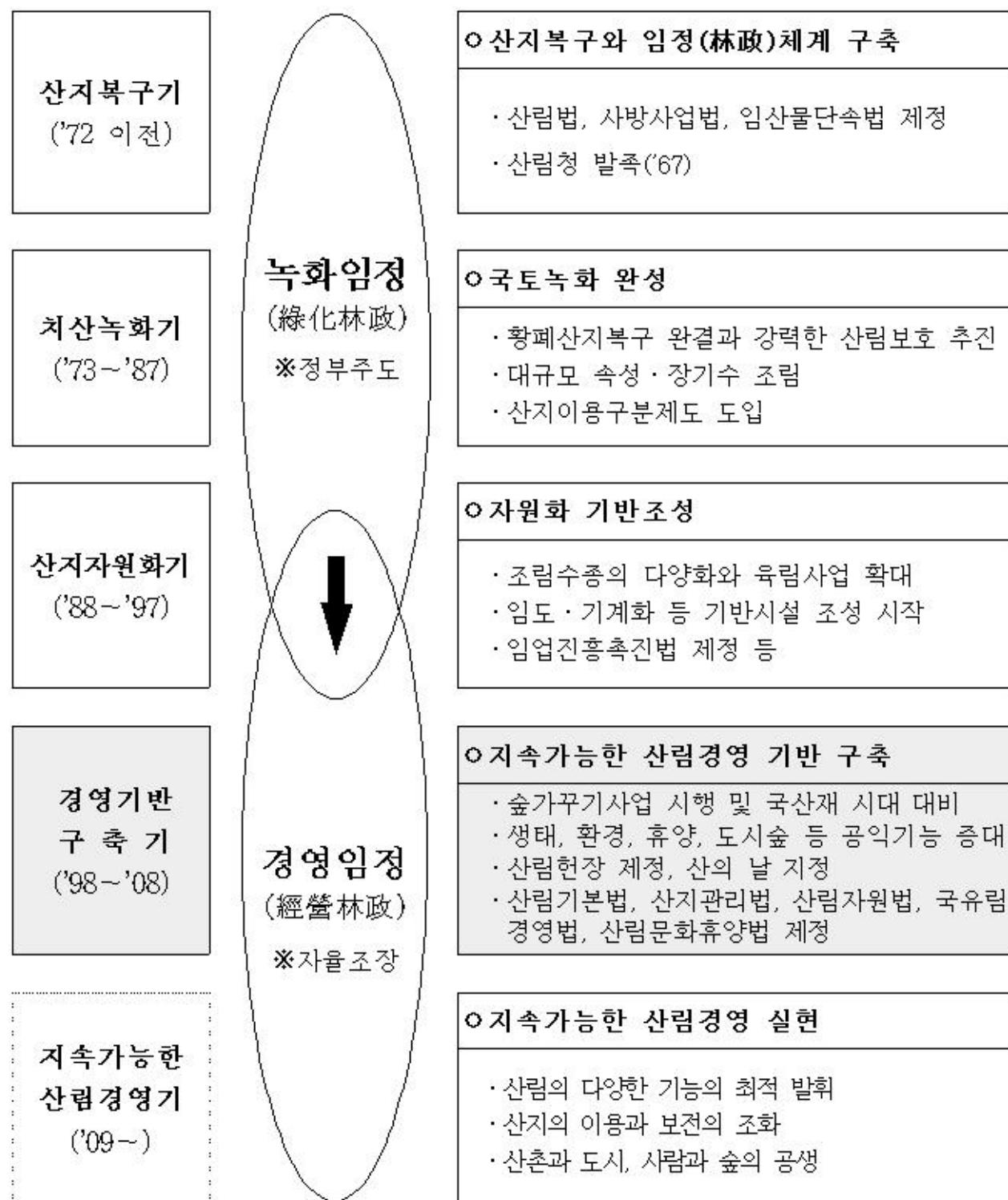


-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혜택 등을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공익적 가치 : ('95) 34조 6,110억 → ('00) 49조 9,510억 → ('03) 58조 8,813억원

□ 난개발 방지 등 산지관리 부문

- 도시화·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산지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그동안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와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정
 -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보호지역 지정(263천ha)
- 새로이 마련된 산지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정책적 과제

산림정책의 변천과 지향



II.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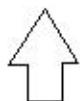
1. 산림정책의 미션 · 비전 및 정책목표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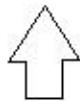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비전

2010 ! 산림가치 100조 !



- 2010년까지 100조원의 산림가치 창출(현재 62조 : 경제 3조 + 공익 59조)
- 산림가치 2배 대형재해 0% 고객만족도 1위 벤치마킹 0순위
- 업무효율 2배 예산낭비 0% 청렴도 1위 정책불량률 0%



정책목표

5대 정책목표, 20개 이행과제

- | | |
|------------------------------|---------|
| 1.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 5개 이행과제 |
|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 3개 이행과제 |
| 3.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기능 제고 | 5개 이행과제 |
| 4. 침체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 5개 이행과제 |
| 5.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 정착 | 2개 이행과제 |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정책목표 1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정책 여건>

- 참여정부 들어 100만ha의 숲가꾸기 계획('04~'08) 수립
 - 연평균 20만ha를 가꾸어야 하나 실행면적은 17만ha 수준
※ 시급히 가꾸어야 할 숲이 전체 산림의 34%인 215만ha
 - 숲을 가꾸는 기술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의 품질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
- 국토의 64%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8%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이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
 - 국산재는 주로 보드류·펄프용 칩 등 저급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마저 계절적으로 수급이 불안정
- 수원함양 및 탄소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제공 등 숲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발휘도 크게 미흡
 - 숲을 제대로 가꿀 경우 수원함양은 1.3배, 탄소저장은 1.1배 향상되고 하충식생이 8~10배 발달
- 교토의정서 발효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
 - 국내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이행 과제>

① 『숲다운 숲 가꾸기』를 제1의 혁신과제로 추진

□ 숲가꾸기 확대 시행을 통해 숲에서 일자리를 창출

- ('05) 1,475억 원, 170천ha → ('06) 1,584억 원, 182천ha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05) 2천 명 → ('06) 3천 명(50% 증)

□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숲가꾸기 정책품질 혁신

- 현장토론회를 통해 기술자문 및 훈련, 사업평가를 함께 시행
- 숲가꾸기 혁신매뉴얼 제작·보급 및 디지털 설계프로그램 도입
- 작업 참여자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 고속도로변 숲을 아름다운 경관림으로 조성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서울~대전 구간 142km) 사업시행
- 금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잔여구간, 중부·호남·영동고속도로로 확대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 추진

-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유역 20천ha의 숲가꾸기 실시
-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장흥댐·대곡댐 시범 숲가꾸기 사업('02~'06)을 완료하고 8개 댐 유역으로 확대

□ 국유림 연접지역의 사유림에 대하여 국가가 경영 대행

- 희망산주를 대상으로 지방산림청과 업무협약 체결

② 지형과 기후에 맞는 특색있는 나무심기 추진

□ 맞춤형 산림지도 제작·보급 확대

- 지난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하여 현지 적용
- 금년부터 산주들이 적지적수(適地適樹)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

□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

- 경제림 육성단지(450단지, 292만ha)를 중심으로 소나무, 참나무, 백합나무 등으로 개량 조림
 - 산주가 원하는 수종 보급을 위해 현물에서 현금지원으로 점차 전환
- 도시, 마을, 도로 등 주변에는 큰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 조성
- 수원함양보안림 등에는 활엽수 조림 실시

□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하여 다락밭 등 유유토지의 조림 지원

- 한계농지 등 유유토지 실태 파악 및 연차별 조림계획 수립
- 농지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을 식용·약용 위주에서 목재 생산용 수종 등으로 확대토록 제도개선

□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정착

- 금년부터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채취에서부터 공급·조림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채종원·채종림 확충(263→344㏊)

③ 국산재 공급 확대 및 이용 촉진

□ 산업용재의 안정적 공급방안 지속 추진

- 치산녹화기('70년대)에 심은 리기다소나무를 펄프·보드류 원자재로 공급하고 우량수종으로 새로운 숲을 조성(6,600ha)
- 목재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별 공급계획 수립·추진
- 국유림에 합판용재 생산단지 지정 운영(45개소, 1,738ha)
※ 지난해 처음으로 합판용재의 1%(7,430m³)를 국내재로 공급

□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기술 개발

- 숲가꾸기 산물, 산지전용지 내의 버려지는 목재 등 최대한 수집 활용 : ('05) 193천 m³ → ('06) 232천 m³(20% 증)
-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운영 활성화 지원(20억원)
- 건축부재, 토목용재, 구조용집성재 등 목재이용기술 개발

□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문화 전통

- 목재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원료의 안정적 구입 지원(34억원)
- 목재 우수성 홍보를 위해 목제품 야외전시장 조성(4개소)
-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목재이용 프로그램 운영(목재교실 등)

④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 우리 고유의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체계 확립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
- 산림습지, 계곡천 등의 생태계 보전 관리방안 수립
- 광릉숲(6,282ha)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 자생식물의 자원화 촉진

- 지역 경관과 어우러진 자생식물단지 신규 조성(2개소)
-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확대(860천→999천점)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확대(33천→45천ha)
- 국유림 내의 자생식물 서식지 조사 후 복원 방안 강구

□ 수목원·산림박물관·생태숲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 타당성 심사 강화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립수목원 분원 설치방안 모색
- 수목원 코디네이터 신규 배치(35명)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⑤ 탄소흡수원 확충과 해외조림 확대

□ 2022년까지 전체 산림 625만ha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구축사업 추진

- 산림사업을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받도록 통계기반 구축
 - 산림경영실적관리시스템, 온실가스통계시스템, 목제품탄소계정시스템
- 탄소흡수원 해외조림(2017까지 15만ha)을 추진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사례 분석 등 정보기반 구축

□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을 목표로 투자확대 여건 조성

- 참여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음자금리 인하(3→1.5%)
- 투자환경 조사비의 국고보조 신규 지원(25천원/ha)
- 열대목재자원 보유국과 임업협력을 강화하여 투자여건 조성(베트남, 미얀마, 호주 등)

<정책 여건>

-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 증가
 - 특별방제대책 추진 및 특별법 시행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
 - '05년 말 : 8개 시·도, 53개 시·군·구 7,811ha
 - 자연확산보다 피해목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감염이 주요한 확산 원인(60%)
- 봄철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 초래
 - 최근 5년간 연평균 586건의 산불로 피해발생(6,600ha, 163억원)
 - 특히 피해규모 30㏊ 이상인 대형산불이 건수로는 1.3%에 불과하나 피해면적의 91.3%를 차지
 - 지난해 강원 양양산불 이후 정부차원의 대형산불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이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상 산사태에 취약
 - 그동안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크게 미흡한 실정

<이행 과제>

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경주

□ 예방방제 강화 및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방제

- 금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실시(520㏊)
 - 우량소나무림, 문화재 주변, 군사지역 등 방제작업이 곤란한 지역 등
- 항공방제 횟수(3→5회) 및 면적 확대(49천→115천㏊)
- 디지털촬영시스템을 도입한 항공예찰 및 예찰원 확대(71→444명)

□ 방제방법을 개선하여 방제성과를 극대화

- 신규발생지, 반복피해지는 피해재발을 막기위해 단목(單木) 벌채방식 대신 소구역 모두베기로 전환
 - 벌채목은 지역여건에 맞게 파쇄·소각·훈증방식으로 처리
 - 벌채 산물은 파쇄장비를 지원하여 칩·톱밥 등 산업용으로 공급
 - 『재선충병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치료제 등 개발 추진('06~'08)
- ※ 방제비 대폭 증액 : ('05) 291억원 → ('06) 507억원(74% 증)

□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인 감염확산 차단

- 소나무 생산지와 수요처를 중심으로 단속초소 설치 운영
 - 산림관련 단체, 지역 NGOs, 주민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활용
- 소나무류 반출시 극인찍기 제도 도입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감염목 불법이동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100~200만원)

② 산불 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 최소화

□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 강화

- 주요시설 주변 등에 산불에 강한 숲 조성(내화수림대 2,800ha)
- 산림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의 인화물질 제거사업 추진(472ha)
-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진입도로 확충(20km)
- 주요 사찰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림에 소화전 설치(3개소)

□ 산불방지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 추진

- 산불진화 헬기의 연차적 확충을 통해 초기진화 능력 제고
 - ('05까지) 42 → ('06) 3 → ('09까지) 60대
 - ※ 초대형헬기 : ('05까지) 1 → ('06) 1 → ('09까지) 4대
- 전국 30분 이내 현장출동을 위한 지방격납고 확대 설치
 - ('05까지) 8 → ('07) 1 → ('09까지) 11개소
- 진화차량·무인감시카메라 등의 현대화를 통해 성능 향상
- 첨단 영상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정보 및 상황관리 디지털화

□ 산불방지 조직 및 인력 보강

- 중앙의 효율적인 진화지휘를 위해 산림재해상황팀 신설
- 시·군,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4천→6천명)
- 동해안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관리센터』 구성·운영

□ 효과적인 산불대응시스템 확립

- NSC 주관으로 마련한 산불재난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 통합지휘체계의 반복 교육·훈련 강화
-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확산예측모델 현장 활용
-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을 통한 산불진화교육시스템 개선
- 산불 예방·진화·복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③ 집중호우·태풍 등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

□ 산사태위험지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위험 예보 실시
 - 전국 산림을 위험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DB화하여 금년부터 실용화
- 산사태 위험지(100개소)를 확대 지정하고 사후관리 강화

□ 수해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치산치수대책 추진

- 수해방지시설, 조림, 숲가꾸기 등이 통합된 산림유역관리 사업 확대 시행
 - ('04) 4 → ('05) 5 → ('06) 7개소
- 태풍·해일 등의 피해 저감을 위해 해안방재림 신규 조성(10ha)
- 뿌리가 깊은 참나무류 등 활엽수림 및 혼합림 조성 확대

<정책 여건>

- 그동안 국유림은 국가 위주로 관리하였고 자연휴양림 등 제한적 공간만을 국민에게 개방
 - 국유림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국민 참여 욕구 증가
 -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 및 주민 소득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날로 증가
 - 매년 여의도 면적(840ha)의 국토가 묘지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개선 필요
-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가 급증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성 증가 및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필요
 - 등산인구 5천만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등산문화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한 실정
 - 도시림 · 학교숲 · 가로수 등 생활주변 녹지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
 -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시민 단체 · 지역주민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

<이행 과제>

①『국민 참여의 숲』 조성 및 산촌개발

□ 국유림을 국민들의 산림체험공간으로 개방

- 접근성이 용이한 국유림을 『국민 참여의 숲』으로 지정
 - ('04~'05까지) 73개소 12천ha → ('06까지) 120개소 20천ha
- 개인·단체·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협약체결 후 무료 이용
 - 개인은 나무심기 등 산림작업체험 중심으로 운영(체험의 숲)
 - 기관·단체는 숲가꾸기, 산림교육·문화 중심으로 운영(단체의 숲)
 - 동호인에게는 산림레포츠 활동중심으로 운영(산림레포츠의 숲)
 - 민자유치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사회환원(사회환원의 숲)

□ 숲과 전통문화, 소득원 사업을 연계한 산촌개발 추진

-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한 『숲이 있는 귀촌마을』 조성 추진
- 1사 1산촌, 산촌체험프로그램 등 산촌과 도시의 교류 촉진
- 마을 주민의 창의와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국유림 경영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06.8.5부터 시행)
- 참여의 숲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숲가꾸기 장비 등 지원

② 국유림 이용 확대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 국유림 대부용도 제한 폐지 및 사용 범위 확대

- 공용·공공용 등으로 제한하여온 국유림 대부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 폐지
-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역 주민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는 송이채취권 허용을 확대

※ '05년말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 : 13,487건, 30,496ha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림 편입 허용 및 공동 산림 사업제도 도입

- 도로·군사시설 등의 용도에 한하여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여 왔으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활용을 허용
- 지자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하여 지역발전, 소득증대 사업을 할 경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농·산촌지역 소득개발, 수목원·휴양림·산림욕장 등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06.8.5)

③ 자연친화적인 『수목장(樹木葬)』 제도 도입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 수목장 운영에 대한 기본틀 마련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보건복지부와 협의)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대하여 수목장림이 가능토록 추진(산지관리법 개정 추진)
- 국가 또는 산림조합이 수목장을 운영 ·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국유림경영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시 반영)

□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목장 후보지 선정

- 지난해 선정된 후보지 10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개소당 약 30ha)
- 수목장림 모델 개발 및 산림조합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추진(1개소)

④ 산림문화 · 휴양 서비스 확대

□ 국립 자연휴양림의 책임경영 강화

- 금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기관장을 민간전문가로 채용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서비스 향상
- 성수기와 주말은 30% 할증, 비수기와 주중은 30% 할인 등 요금차등제 실시('06. 3월부터)

※ 전국 자연휴양림 98개소 : 국립 31, 공립 50, 사립 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서비스 강화

- 웰빙시대에 걸맞은 휴양시설의 선진화·표준화
 - 신규시설시 실명제 시행으로 책임의식 고취
 - 휴양림관리 용품의 표준화, 표준설계 제도 도입 등
- 전국의 주요등산로 경비(76km), 등산학교 운영, 등산안내인 및 산악구조대 도입 등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 휴양만족도 제고를 위해 숲해설가, 생태전문가 배치 운영
- 환자리산 생태·역사·문화 탐방로 신규 노선 개발(262km)

⑤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도시림 조성 확대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

-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특성에 맞는 도시림·가로수 조성 추진
 - 연구용역을 거쳐 상반기 중 『도시녹지 조성 관리 기본지침』 마련
-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인 가로수 조성·관리 강화
 - 도로 신설시 가로수 조성을 의무화하고 가로수 관리를 표준화
- 국·공유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 전문인력 현장 배치로 생태교육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학교숲 조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산림체험교육 공간 제공

- 학부모와 학생·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 및 사후관리
 - ('05까지) 866 → ('06) 300 → ('07까지) 3,000개교
- 교육부·지자체·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파트너쉽 강화

<정책 여건>

-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산림경영이 침체
 - 전체 산림의 70%가 사유림이고 산주수는 200만명에 달하나 평균 소유면적이 2.3ha로 대부분 부업형태로 경영
 - 조림에서 벌채까지 50~8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내부투자 수익률(IRR)이 0.3~1.2%로 낮은 실정
- 농산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
 - 임업을 업으로 하는 가구는 67천가구에 불과하고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경영인은 2천명 수준
 - 임산물 생산액은 GDP 대비 0.4% 수준, 임업인 연평균 소득은 23백만원으로 농업인 소득의 81%
 - 기반시설인 임도는 ha당 2.4m로서 일본(5m), 독일(44m)에 비해 대단히 미흡, 기계화율도 선진국의 24% 수준
- 반면 웰빙 봄 등의 영향으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밤·표고·송이 등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임업소득 향상 가능성 증대

<이행 과제>

① 고소득 임산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 임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밤 산업 육성

-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해 6만ha의 밤나무림을 집약 관리
 - 노령목 개신, 저수고(低樹高) 재배, 토양개량 등 추진
- 밤재배자의 현장애로 해소 및 기술·정보지원 강화
 - 국립산림과학원『밤연구센터』 운영 및 신품종 개발 보급
- 수입이 증가하는 중국 밤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임산물 생산액의 1위인 표고산업의 경쟁력 향상

- 우리 기후에 맞는 우량종균 연구개발 지속 추진
 - 2010까지 신품종 9종(원목 6, 톱밥 3) 개발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방식 개선 및 기술지원 강화
 - 중국, 대만, 일본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목재배 위주에서 톱밥 재배의 비율을 확대(3→4%), 표고재배 컨설팅사업 시행(60가구)

□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소득품목 집중 지원

- 송이·산약초·산채류·오갈피 등 생산단지 지원
 - ※ 특용작물 재배시 산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 꽃감, 대추, 호도 생산기반 및 수액의 산업화 지원(24억원)
 - 조경수·분재 등 산림관상자원 육성 지원(53억원)
- ☞ 우리 임산물의 수요창출 등을 위해 2010년 산림 EXPO 개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수급안정과 출하 조절을 위해 저장·건조시설(66개소) 확충 및 생산자 조직 운영자금 지원(525억 원)
- 시장현실에 맞게 임산물 표준출하규격 개선
 - 수액, 생취나물, 더덕, 생도라지, 생대추, 호도 등
 -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비, 공동선별비 지원(5억 원)
- 전국 산림조합 직매장에서 임산물 리콜제 확대 실시
- 밤, 장뇌의 생산이력제 실시방안 강구

② 산림경영 주체 육성 및 경영여건 개선

□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 육성지원 강화

- 선발 : ('05까지) 1,897 → ('06) 150 → ('07까지) 2,197명
-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부담경감('06.1월부터)
 -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임야매입자금 : 3 → 1.5%
 - 산림소득 종합자금, 목가공시설 등 : 4 → 3%

□ 산주의 산림경영 의욕 고취

- 10ha 이상 소유 산주(76천명)의 산림경영 참여 유도
- 산주 DB를 활용하여 산림경영 정보 등 적극 제공
- 『산주와의 만남』 행사를 중앙 및 지역단위로 개최하여 경영 컨설팅 활동 강화

□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환원방안 연구 및 봄 재해보험 등 산림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 임업관련 세제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감면 및 영세율 적용 확대 등
- 16개 읍자사업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신축적 운영 및 자율성 제고

③ 산림조합을 산주중심 조직으로 육성

□ 산주의 산림조합원 가입을 확대

- 산주조합원 비율 : ('05) 33 → ('06) 37 → ('14) 60%
- 조합원 소유산림 : ('05) 864 → ('06) 1,091 → ('14) 2,729천ha

□ '05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우려)조합 구조개선

- 부실로 정상회복이 어려운 5개 조합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
- 부실이 적어 정상회복이 가능한 22개 조합은 경영정상화 추진
- 부실 및 부실우려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 보완

□ 산림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및 감독기능 강화

- 산림조합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비 신규 지원(16억원)
- 조합감사위원회 및 경영지도위원회 기능 강화

④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林道) 확충 및 관리 강화

- 환경친화적인 임도신설 및 기존임도의 구조개량 확대
 - 신설 : ('05까지) 15,825 → ('06) 283 → ('07까지) 16,658km
 - 구조개량 : ('05까지) 6,583 → ('06) 869 → ('07까지) 9,297km
-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국유임도의 민간위탁관리 확대
 - ('05) 1,100 → ('06) 2,100 → ('07) 3,000km

□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제고

- 우리 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 및 작업시스템 개발·보급
 - 궤도식 소형 임내차 및 간벌재 생산시스템 작업공정 개발
- 권역별로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기계화시범단지 운영
 - 도별 1개소 목표로 기계지원센터 설치 ('05까지 6→7개소)
 - 지방청별 1개소씩 5개소의 기계화 시범단지 운영 (12,370ha)
- 임업인 부담경감을 통한 임업기계·장비 이용 촉진
 - 영세율 적용(15종) 및 석유류 면세(10종) 제도 적극 활용

□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 양성

-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임업기능인 양성 확대
 - ('05까지) 6,835명 → ('06) 1,230명 → ('07까지) 10,000명
- 사업물량의 연중 균형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보장
- 산림조합중앙회 3개 훈련원에서 기술교육 강화

⑤ BT 기술 등을 이용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성과 창출

- 소나무재선충병 해결을 위한 실천적 기술 개발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101억원 투입('06~'08)

-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직접지불제 등 핵심과제 연구 강화

- 숲다운 숲을 가꾸기 위한 산림관리기술 개발

- 임산버섯, 유실수 등 고부가가치 신품종 및 대량증식 기술 개발

□ 산림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법 개발 및 실용화 기술 보급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예측 시스템 개발

- 개발 완료한 우수신품종 보급 및 보유기술 온라인 DB 구축

□ 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

- 지역 및 현장중심 연구를 강화하여 지역현장의 산림문제 해결과 임업소득 증대 도모

- 타분야 연구기관, 임업선진국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기초연구 지원과 인력의 양성 추진

- 산림과학기술개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분담

<정책 여건>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토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
 - 2020년까지 385천ha의 신규토지 수요가 전망되어 일정부분은 산지에서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
 - 산지의 타용도 전용 : ('90) 10,488 → ('00) 7,170 → ('04) 7,952ha
 - 산림의 경제·환경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림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증대
-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의 정착 필요성 증대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은 재해발생, 경관훼손, 산림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
 - 기업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시책 추진 증가에 따라 산지이용 수요도 증가 추세
- 백두대간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상존
 - 보호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 기준이 없어 공정하고 투명한 보호지역 관리가 미흡
 - 인위적인 훼손지를 복원·복구하여 산림생태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이행 과제>

① 산지관리제도의 합리화 방안 강구

□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 강화

- 산림경영 및 자연생태계·경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는 타용도 전용을 억제
- 산지에 대한 각종 개발 수요는 가급적 준보전 산지에서 충당하고 보전산지 편입을 최소화
- 불가피하게 개발되는 산지는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 방지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
-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일명 '산파라치') 도입 운영(건당 50만원 이하)
- 산지전용지에 대한 중간복구제도 도입 및 복구비 반환 규정 신설

□ 채석을 단지화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

- 2010년부터는 신규 채석은 채석단지에서만 허용하고 공용·공공용 이외의 개별적인 신규 채석허가를 금지
- 기존 채석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까지 단지화로 전환하거나 부적격지는 허가물량까지만 채석허용 추진

②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06~'15)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 방안 강구

- 지정된 보호지역 26만ha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지는 공익용 산지로 구분 관리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별로 차등화된 개발행위 협의기준 마련
 - 지자체, 주민, 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개발사업지에 대한 DB 구축으로 관리 강화

□ 백두대간 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지 복원·복구

- 자연·인문·역사·문화 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DB화 사업 추진('06~'10)
- '05년 훼손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 유형별 복원 모델 개발 및 연차별 복원·복구계획 수립
 - 시범복원(4개소) 및 자병산 장기복구계획 마련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1개소, '06~'08)

□ 지역주민 소득지원 강화

- 소득증대 특화사업 확대('05년 72억 원 → '06년 115억 원)
- 생태 산촌마을 조성사업 등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우선 지원
- 매각희망 토지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매수 추진(769억 원)

III.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1. 전자정부를 통한 자연휴양림 맞춤형 서비스 구현

- 기존의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은 이용자 폭증시 예약, 정산처리, 이용편의 등에 있어 고객 불만 야기
 - 입금확인 지연, 취소시 적기 환불 미비 등 공정성 문제
 - 야영장이나 숲 해설 이용 등은 예약시스템 부재
- 이용자 편의성 및 예약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3/4분기)
 - 대규모 웹 회원수(50만)에 맞는 DB 및 프로그램 재설계
 - 예약 취소자 발생시 빈방찾기 기능, 야영장 등 부대시설 예약 등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
- 통합정산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휴양림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상반기)
 - 계약금, 시설 이용료 등 모든 정산업무를 온라인 통합관리
 - 휴양림별 각종 물품의 이력관리 및 중앙통제로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
- 휴양림 고객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성수기(7, 8월) 및 주말(금~일요일) 이용을 제외한 이용자에게 이용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
 - 2006. 1. 1 이후 사용분부터 마일리지 적립
 - 휴양림별로 관광코스, 기상, 교통, 장애인 시설안내 등의 정보와 웹 회원 ‘마이 페이지’ 제공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2.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국유림 경영 효율화

- 기존의 국유림 경영·관리 프로세스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폐쇄적 의사결정으로 업무의 비효율과 불신 초래
 - 종이 대장·도면에 수작업으로 각종 정보 입력·검색
 -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벌채·임도 등에 대한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의 마찰이 빈발
 - 지난해 국유 임산물 매각 등 일부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평가, 정보분석 등의 기능을 갖춘 「국유림경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중)
 - 도면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을 웹상에서 실시간 관리하고 국유림 경영정보를 신속히 공유·활용
- 국유림 경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지방산림청별로 지자체·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국유림 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 경영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반기)
 - 전·현직 업무 담당자, 전문가로 구성된 국유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On-line 상에서 쌍방향 운영(1/4분기)
-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추진
 - 국유림 대부, 국유임산물 매각 등 대민업무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선(연중)
 - 5개 지방청 공통업무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 개선안 마련(하반기)

3.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현 단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지 못할 경우 소나무가 전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
 - 남부지방에 한정되어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05. 10월 강릉, 동해지역에도 발생
 - 백두대간과 금강송자생지 등을 심각하게 위협
- 방제정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치밀한 정책품질관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제고
 - 정책단계(수립→홍보→집행→평가·환류)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연중)
 - 금년 새로이 추진하는 예방, 방제방법에 대해 중점 실시
 - 소구역 모두배기, 나무주사, 디지털 촬영시스템 등
 - 품질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계층별 주기적 점검·확인
 - 실무자(기록) → 국·과장(점검·확인) → 청·차장(평가)
- 정책품질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방제정책 추진 과정상의 성공 및 실수 사례 등을 학습하는 재선충병 방제 현장토론회 개최(반기별)
 - 전·현직 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on-off line으로 운영(상반기)
 - 정책품질관리 정보시스템(행정자치부 보급)에 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상반기)
 - 행정자치부 보급이 지연될 경우 KMS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1. 정책성과 측정체계

정책목표 / 이행과제	성과지표	금년도 목표	관련통계	검증방법
1.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① 「숲다운 숲가꾸기」를 제1의 혁신과제로 추진	숲가꾸기 정책 품질향상도	81점	'05년 80.8점	전문가 품질 평가
② 지형과 기후에 맞는 특색 있는 나무심기 추진	경제림 개량조림 정책성취도	78점	'05년 78.2점	전문가 품질 평가
③ 국산재 공급 확대 및 이용 촉진	산업용재 공급량	1,551천 m ³	'01년 951m ³ '02년 1,019m ³ '03년 1,084m ³ '04년 1,354m ³ '05년 1,712m ³	실적확인
④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확대	12,000ha	'01년 121ha '02년 3,517ha '03년 1,489ha '04년 50ha '05년 11,372ha	실적확인
	생물자원 수집량	25,000종	'01년 9,530종 '02년 18,100종 '03년 20,000종 '04년 21,870종 '05년 32,104종	실적통계 자료
⑤ 탄소흡수원 확충과 해외 조림 확대	해외조림 추진실적	9,200ha	'02년 12,923ha '03년 12,910ha '04년 9,379ha '05년 8,765ha	실적확인

정책목표 / 이행과제	성과지표	금년도 목표	관련통계	검증방법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경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본수 감소율	10%	'01년 70,147본 '02년 114,996본 '03년 160,999본 '04년 152,142본 '05년 655,237본	실적통계자료
②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 최소화	건조일수당 산불 피해 면적	18ha	'01년 8ha '02년 33ha '03년 1ha '04년 20ha '05년 19ha	실적통계자료
	건당 산불피해 면적	3.5ha	'01년 1.2ha '02년 7.5ha '03년 0.5ha '04년 2.9ha '05년 4.0ha	실적통계자료
③ 집중호우·태풍 등 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산림재해 면적 (예상재해 대비 저감치)	890ha	'01년 185ha '02년 2,705ha '03년 1,330ha '04년 233ha '05년 469ha	실적통계자료
3.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기능 제고				
① 「국민 참여의 숲」 지정·운영	지정대비 운영률	80%	'05년 53%	실적확인
② 국유림 이용 확대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공동사업 이용 면적	31,000ha	'01년 32,093ha '02년 31,517ha '03년 31,464ha '04년 31,808ha '05년 30,496ha	실적확인
	국유림 면적비율	23.4%	'01년 22.5% '02년 22.6% '03년 22.7% '04년 22.9% '05년 23.2%	임업통계연보

정책목표 / 이행과제	성과지표	금년도 목표	관련통계	검증방법
③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도입	입지선정 조성기준 마련 및 모델림 선정	조성기준 마련 및 모델림 선정 3개소		실적확인
④ 산림 문화휴양 서비스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자 증가율	11%	'02년 6.8% '03년 6.6% '04년 10.8% '05년 10.8%	실적통계자료
	산림휴양 시설 이용자 만족도	79점	'04년 72점 '05년 75점	만족도 조사
⑤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도시녹지 확충실적	79개소	'03년 12개소 '04년 9개소 '05년 76개소 (5%확대)	실적확인
4. 침체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① 고소득 임산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단기임산물 생산 단지 조성실적	12개소	'01년 3개소 '02년 5개소 '03년 5개소 '04년 6개소 '05년 7개소	실적통계자료
② 산림경영 주체 육성 및 경영여건 개선	전문임업인 육성	150명	'03년 55명 '04년 55명 '05년 130명	실적통계자료
③ 산림조합을 산주중심 조직으로 육성	산주조합원 비율	37%	'04년 29% '05년 33%	실적통계자료
④ 산림경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ha당 임도밀도	2.50m	'01년 2.35m '02년 2.40m '03년 2.42m '04년 2.44m '05년 2.48m	임업통계연보
	임업기능인 양성	300명	'01년 187명 '02년 231명 '03년 364명 '04년 360명 '05년 360명	실적통계자료

정책목표 / 이행과제	성과지표	금년도 목표	관련통계	검증방법
⑤ BT 기술 등을 이용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임업기술·정책 개발 보급률	81.8%	'01년 39.9% '02년 50.4% '03년 64.0% '04년 71.0% '05년 78.7%	실적통계자료
5.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제도 정착				
① 산지관리제도의 합리화 방안 강구	산지전용 제한지역 및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정비	192,475ha	-	실적확인
②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실적 및 자원 실태조사	4개소 100km	-	실적확인

2. 혁신과제 측정체계

정책목표 / 이행과제	성과지표	금년도 목표	관련통계	검증방법
① 전자정부를 통한 자연 휴양림 운영개선	예약신청 완료시간 휴양림서비스 만족도 휴양림정산업무 시간단축	1일 79점 1일	'05년 3일 '05년 75점 '05년 7일	실적확인 만족도조사 실적확인
②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국유림 경영시스템 효율화	영림계획 수립기간 실적 자료분석 시간 지문위원회 구성운영실적 BPR 증가률	4개월 즉시 구성 5개소 운영 1회 10건	'05년 6개월 7일 - 8건	실적확인 " " "
③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제전략 수립여부 체크리스트 이행률 방제방법 개발·실행	수립 85% 2건	- - -	실적확인 " "

V. 마무리

-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산림은 국민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삶터이고 쉼터입니다.

금년도 우리 산림정책은 이러한 터전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림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커서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고용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산림청의 핵심사업인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숲이 『보람있는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숲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고 우리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숲이 있는 귀촌마을, 국민참여의 숲 조성 등 누리고 이용하는 산림정책을 통해 우리 숲이 『풍요로운 삶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이제 우리 숲은 국민들에게 견진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등산인구 5천만명 시대에 걸맞은 등산문화 정립 등을 통해 우리 숲이 『활력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forest.go.kr>